

# 노마스크 단속 첫날 유흥가 불야성...턱·입스크 여전

### 위반자 적발 애매...자영업자 고충 토로 "보완 필요" 적발시 당사자 10만원·시설관리자 300만원 과태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지난 13일 광주지역 유흥가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과 미착용한 사람이 혼재된 모습이였다.

광주 동구청 공무원들로 꾸러진 단속반은 총장로·대인동·수기동 일대 술집을 꼼꼼히 살피며 마스크 착용 점검에 나섰다.

이른바 '불금'을 맞은 술집 앞에는 1~2m의 줄이 늘어섰고, 술집 내 테이블 간격도 1m가 채 되지 않은 50cm에 그쳤다. 앞·옆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았다.

대부분 시민이 마스크를 코 끝까지 착용한 반면, 술집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률은 저조했다.

'음식 섭취'는 마스크 의무화 규정에서 예외다. 손님들은 술을 마시느라

한 칸에 마스크를 벗어 놓았다.

술집 앞에서 흡연한 뒤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가는 일행이 많았다. 취기가 오른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다.

차모(25)씨는 "술자리 분위기가 고조되면 마스크 착용을 잊는다. 취기를 가라 앉히기 위해 바깥 바람을 쐬는 경우 마스크를 잠깐 벗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점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점검표를 든 공무원이 술집 업주에게 "거리 두기 방역수칙이 개편, 일반 음식점인 '술집'도 좌석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술집 관리자 김모(25)씨는 "간격 조정을 위해 테이블을 빼는 것은 매출과 직결돼 어려운 부분이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같은 시각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 유흥주점, 일부 자영업자들은 썰렁한 홀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테이블 간격 유지 등 방역 여부를 점검하는 공무원들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업주 김모(34)씨는 "손님이 하루에 1~2팀 올라 말까한다. 유흥주점서 확진자가 나왔단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단속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 방역 지침은 철저히 지키겠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업주는 '손님들이 마스크를 안 써 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울가 걱정'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업주 이모(53)씨는 "상무지구 확진자 소식 뒤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업무를 혼자 감당한다. 몸도 마음도 지친다"며 한숨을 쉬었다.

법제화 취지를 공감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예외 상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모(21·여)씨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다. 문제는 '잠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13일 오후 9시 광주 동구 총장로 구시청 모 술집 앞에서 일행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하고 있다.

마스크를 벗은 상태인데, 잠깐 미착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가 술자리 밖 마스크 미착용자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 지자체들은 유흥주점(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식당 등 중점관리

시설,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지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단속 항목은 ▲종업원·손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주기적 시설 방역 ▲이용 인원 제한(신고면적 4㎡ 1명) ▲업소 내 마스크 20개 비치

등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 관리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사형·벨브형 마스크 착용과 입·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 20·30대 다수감염, 전파력·사회활동으로 n차 우려

### 확진 34명 중 25명 20~30대...검사대상도 연일 2000명 이상



15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의사와 환자 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이 전파력이 강한 20, 30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지역에서는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520번을 중심으로 광주교도

소 관련 10명, 광주528번을 기점으로 상무동소주방 확진자 11명, 전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공의인 광주546번 확진자 이후 동료 5명, 환자 2명, 보호자1명이 감염됐다.

감염자 34명 중 25명(73.5%)은 20, 30대로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여서 동선과 접촉자가 많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해 n차 감

염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나머지 9명은 50대와 60대 등이다.

20, 30대 감염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검사자도 수천명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2일 2521명, 13일 2575명, 14일 2214명, 이날에도 3000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를 받고 있는 접촉자들도 대부분이 20, 30대여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20, 30대 중 최근 2주 동안 주점이나 유흥업소를 다녀온 후 증상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봉우기자

## "뺏아줘요" 돈 봉투 건넨 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간부 집유

###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훼손, 죄질 불량"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전날 대의원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아내와 부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와 B(66)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 추징금 20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장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 새마을금고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남 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당선자의 아내인 A씨와 부이사장 선거 당선자인 B씨는 선거 전날인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15분께 대의

원 집 앞에 찾아가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건넨 돈 봉투를 대의원이 받지 않겠다고 하자 B씨가 대의원의 걸 옷 주머니에 봉투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24분께 다른 대의원의 집 앞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정기자

## 영암서 체험용 경비행기 추락...2명 중상

### 착륙 시도 중 전봇대 전깃줄에 걸린것으로 추정

14일 오후 4시23분께 전남 영암군 군서면 한 비행기 착륙장 주변 농경지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경비행기 조종사 A(40)

씨와 체험객 B(47)씨가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들은 한 경비행기 교

육기관이 마련한 비행 체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전봇대 전깃줄에 걸려 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